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검 토 보 고**

■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118호)

2026. 3.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5
1. 이란 민주화 시위 관련 경과	5
2. 관계 부처 의견	8
3. 검토 의견	9
※ 참고자료	13
1. 이란 약황	13
2. “2025.12.25.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 차원에서 이란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 주요 요지	14
3.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란을 위해 시위하는 이란 국민들을 인정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안	17

I. 제안 및 회부

1. 발 의 자 : 이언주의원 등 77인
2. 발의일자 : 2026년 1월 16일
3. 회부일자 : 2026년 1월 19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최근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에 대하여 이란 정부가 군과 치안 세력을 동원하여 무차별 발포, 즉결 처형, 대규모 체포 등 극단적인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란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이미 만 여명을 넘은 데다 계속하여서 사망과 부상 등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는 바, 국제 인권단체들은 현재의 양상이 사실상 민간인 학살에 준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상태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무장 상태로 자유와 생존,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자국민에 대하여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이다.

대한민국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국가 폭력의 참혹한 결과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경험한 국가로서,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지정학적 이해관계나 에너지·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란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묵인하거나 방관한다면, 이는 대규모 인권 침해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란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교민들의 생명과 안전 또한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이 학살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란 정부에 대하여 즉각적인 무력 진압 중단과 민간인 살상 행위 중지를 촉구하며, 구금·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이란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과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이란 내 정세 악화로 인하여 위협에 처한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과 보호를 위하여 외교적·행정적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이란 국민이 폭력과 공포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며, 이란이 다시금 자유롭고 번영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

제안이유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장기간 누적된 정치적 억압, 경제적 파탄, 살인적 인플레이션과 국제적 고립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분출된 결과임.

그러나 이란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 대화와 개혁이 아닌 무력과 폭력을 앞세운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서 수천 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자국민의 생존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
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중
대한 인권 문제임.

대한민국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민주화 탄압의 아픔을 경험한 국가로서,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
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역사적·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란 정세 불안은 현지 체류 대한민국 교민들의 생명과 안
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촉구할 필요성이 큼.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이란 정부의 민주화 시위 강경진압을 규탄
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 그
리고 우리 교민 보호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함.

Ⅲ. 검토의견

1. 이란 민주화 시위 관련 경과

가. 민주화 시위 동향

주이란대사관, 주요 외신 및 NGO 보도 등에 따르면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최초 발생한 이후 이란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하였으며, 전국적인 시위가 2026년 1월 8일부터 9일을 기점으로 급증했다가 이란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월 14일 이래에 소강 국면에 접어들.

1월 8일 이후 이란 내 인터넷 등 통신 차단에 따른 현지 정보 접근 제약¹⁾으로 인해, 현재까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집계된 사망자 수는 기관별로 수천 명에서 3만여 명으로 상이²⁾하며 해외 인터넷 접속의 제약도 지속되고 있음.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월 17일 대국민 연설에서 외국 세력이 시위대를 선동해 희생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일자별 시위·종결 현황>

일자	시위·종결 현황
2025.12.28.	테헤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 최초 발생
2026.1.8.~1.9.	전국적 시위 급증 및 이란 내 인터넷 등 통신 차단
2026.1.14.	시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
2026.1.17.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시위 관련 대국민 연설

1) 2026년 2월 일부 복구가 이루어졌으나, 2월 28일 미국의 공습 이후 다시 해외 인터넷이 차단되었음.

2) 외교부 아중동국에 따르면, 사망자 수에 대한 이란 정부 공식 발표(2026년 1월 21일)는 3,100여명이었음.

나. 우리 정부의 관련 대응 경과

우리 정부는 1월 15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란 내 시위에 따른 다수의 사상자 발생 및 지역 정세 불안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음.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는 1월 11일 재외국민 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이후 본부-공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란 내 시위 상황과 우리 국민 안전을 점검하고, 유사시 교민 대피·철수계획도 수립·보완 중이라고 밝힘.

2월 5일 기준, 이란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60여 명이며, 현재까지 접수 및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음.

한편, 1월 19일 우리 정부는 이란 인권 상황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 소집 요청에 동참하였으며, 동 회기에 상정된 이란 인권 상황 관련 결의안³⁾ 채택에 찬성 투표한 바 있음.

다.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 경과

시위 발생 이후 1월 15일 유엔에서는 이란 사태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 서방국가들은 이란의 시위 탄압 및 폭력 사태를 규탄하였으나, 중국 및 러시아는 해당

3) [참고자료 2] 2025.12.28.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 차원에서 이란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

회의가 이란에 대한 내정 간섭 정당화 시도라고 비판함.

1월 23일 열린 이란 인권 상황 관련 제39차 인권이사회 특별회기에서는 찬성 25(한국 포함), 반대 7, 기권 14로 「2025.12.28.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 차원에서 이란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repression of nationwide protests starting on 28 December 2025)」가 채택됨.

한편, 주요 국가 중에서는 미국 하원에서 1월 16일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란을 위해 시위하는 이란 국민들을 인정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Recognizing and expressing support for the Iranian people protesting for a free and democratic Iran) 결의안」⁴⁾이 발의되었음.

1월 23일 유럽의회에서 「이란 내 시위대에 대한 잔혹한 탄압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on the brutal repression against protesters in Iran)」이 채택되었음.

다만, 미국과 영국과 사례를 제외하고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거나 채택한 바 없음.

4) [참고자료 3]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란을 위해 시위하는 이란 국민들을 인정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안

2. 관계 부처 의견

가. 외교부

한-이란 양국관계는 2023년 8월 국내 이란의 동결자금 문제 해결 이후, 관계가 복원되는 추세에 있음.

우리 국회 차원의 이란 정부 규탄 결의 추진 시, 안정적인 한-이란 관계 관리에 어려움이 우려됨.

3. 검토 의견

동 결의안은 이란 정부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강경한 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책임 규명을 주문하며 우리 교민에 대한 보호 및 이란 국민의 민주적 절차를 통한 스스로의 미래 선택에 대한 권리 존중 등을 결의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우리 국회는 그간 다른 나라의 민주화 시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안을 발의 및 채택한 바 있음.

<국회에서 발의·채택된 해외 민주화 시위 등 관련 결의안(제헌국회 이후)>

연 번	의안번 호	결의안명	의결결과
1	177548	버마(미얀마) 민주화 촉구 결의안(임종인의원 등 10인)	임기만료폐기
2	177559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지지 결의안(김영춘의원 등 14인)	임기만료폐기
3	1802132	버마 민주화 및 아웅산 수지여사 가택연금 해제 촉구 결의안 (송영길의원 등 84인)	임기만료폐기
4	1810965	사회주의 인민 리비아 아랍국 정부의 반인도적 행위 규탄 결의안 (박선영의원 등 15인)	대안반영폐기 (2011.03.10.)
5	1810980	리비아 정부의 유혈진압 중단과 민주화 촉구 결의안 (김동철의원 등 37인)	대안반영폐기 (2011.03.10.)
6	1810981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지지 및 교민보호강화 촉구 결의안 (유기준의원 등 11인)	대안반영폐기 (2011.03.10.)
7	1811061	리비아 정부의 유혈진압 규탄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지지 결의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원안가결 (2011.03.10.)
8	2107888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이원욱의원 등 14인)	대안반영폐기 (2021.02.26.)
9	2107916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박영순의원 등 54인)	대안반영폐기 (2021.02.26.)
10	2108203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 (정진석의원 등 25인)	대안반영폐기 (2021.02.26.)
11	2108338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2021.02.26.)
12	2109729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임기만료폐기

연 번	의안번 호	결의안명	의결결과
13	2117648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의원 등 11인)	대안반영폐기 (2022.12.08.)
14	2118187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김상회의원 등 17인)	대안반영폐기 (2022.12.08.)
15	2118696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2022.12.08.)
16	2118952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 (이원욱의원 등 15인)	임기만료폐기
17	2216118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언주의원 등 77인)	소관위접수

다만, 동 결의안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결의안의 시의성이 발의 당시보다 낮아졌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의안이 발의된 2026년 1월 16일 당시에는 시위가 막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태로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국제사회의 행동 촉구 등 차원에서 의의가 있었음.

그러나, 2026년 3월 현재 이란 내 시위는 대학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유혈사태에 대한 보도도 없는 상황임.

오히려 2월 28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주화 시위보다 역내 안정 및 우리 교민의 안전 문제 등 분야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둘째, 유사시 이란 내 거주중인 우리 국민 보호에 있어 이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이 거세짐에 따라 이란 내 우리 교민 60여 명에 대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출입국과 관련하여 이란 정부의 출입국 및 이동 관련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렵 충돌로 안전 우려가 커지며 이란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이 대피⁵⁾한 바 있음.

그러나 동 결의안 처리로 이란 정부와의 관계 악화 시 이란 현지에서의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대피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는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의 경우, 해당 결의안 통과('22.12.8.) 이후 이란 의회 외교안보위원회는 동 결의를 규탄하며 이란 외교부에 한국과의 외교관계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⁶⁾을 발표한 전례가 있음.

또한, 해당 결의안을 우리 외교부가 주한이란대사관 앞으로 송부하

5) 이란·이스라엘 체류 국민·가족 정부 제공 버스 타고 대피, SBS, 2025.06.19.

6) Parliamentary committee condemns S.Korean parliament's backing for rioters in Iran, Tehran Times, 2022.12.17.

자, 이란 측은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우리 측에 강력하게 항의⁷⁾하기도 한 바 있음.

참고로, 우리 정부는 2025년 11월 20일 이집트 공식 방문 계기로 대 중동 구상인 S.H.I.N.E.이니셔티브⁸⁾를 발표하였음.

이에 본 결의안은 그 상징적 의의를 감안하되, 대이란 외교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교민 안전 문제, 가결 시 예상되는 외교적 마찰 등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66

7) 2022년 12월 주이란 한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위와 같은 항의의 뜻을 전함.

8) 이재명 대통령의 카이로 대학 연설 당시 '함께 여는 빛나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S.H.I.N.E.이니셔티브 (Stability, Harmony, Innovation, Network, Education)를 천명하며 평화, 번영, 문화 세 영역에 걸쳐 중 동과 한반도가 미래를 함께 열어나고자 언급한 바 있음.

[참고자료 1] 이란 약황

□ 일반사항

- 수 도 : 테헤란(Tehran)
- 인 구 : 8,627만 2,505명(25.5월, 이란 통계청)
- 면 적 : 174만km²(한반도 7.5배)
- 언 어 : 페르시아어(공용어)
- 종 교 : 이슬람교 98%(시아파94%, 수니파4%), 기타 2%
- 민 족 : 페르시아인(61%), 아제르바이잔인(16%), 쿠르드인(10%)

□ 정치현황

- 국가체제 : 정교일치 이슬람 공화국
- 통치구조 : 국가최고지도자 하 민선 대통령 체제
- 주요인사
 - 최고지도자 : Ayatollah Seyyed Ali Khamenei(하메네이)
 - 대통령 : Masoud Pezeshkian(페제시키안)
 - 국회의장 : Mohammad Bagher Qalibaf(갈리바프)
 - 외교장관: Seyyed Abbas Aragchi(아라키)

□ 경제현황

- GDP : 4,369억불(2024, WB)
- 1인당 GDP : 4,771불(2024, WB)
- 화폐단위 : Iranian Rial 이란 리알화
 - * 2025.12월 기준, US\$1 = 약 120만 리알
- 석유매장량 : 2,086억 배럴(약 13%, 3위)(2024, OPEC)
- 석유생산량 : 326만 배럴/일(약 4%, 7위)2024, OPEC)
- 가스매장량 : 1,201조 입방피트(약 17%, 2위)(2024, OPEC)
- 아연, 구리, 철광석, 우라늄 등 총 68종 광물 보유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62.10.23
- 상주공관 개설
 - 1967.4.1 주이란 한국대사관 개설
 - * 2024.2월 김준표 대사 부임
 - 1975.8.25 주한 이란 대사관 개설
 - * 2023.4월 Koozechi 대사 부임
- 교역량 : 1.67억불(2024)
 - 수 출 : 1.58억불
 - 수 입 : 9백만불
- 재외국민 현황 : 약 70명(2026.1월 기준)

□ 북한과의 관계

- 1973.4.19 외교관계 수립
- 1973.6.22 주이란 북한대사관 설치
- 1973.6.22 주북한 이란대사관 설치

□ 주요 인사 교류

- 방문 인사
 - 15.06. 조태용 외교부 1차관
 - 15.08.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 15.11. 윤병세 외교부 장관
 - 16.02. 주형환 산업부 장관(10차 경제공동위)
 - 16.05. 박근혜 대통령
 - 16.08.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 16.09.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장
 - 17.02. 임환수 국세청장
 - 17.03.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17.08. 정세균 국회의장
 - 17.1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17.11. 천정배 한-이란 의원친선협회장
 - 18.06., 18.11, 19.2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19.11. 송용엽 외교장관 특사(KOICA 이사)

- 21.01. 최종건 외교부 차관
- 21.04. 정세균 국무총리
- 21.08. 최종건 외교부 차관
- 23.09.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 24.06.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 24.07.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 방한 인사

- 15.05. Bazargani 석유부 차관
- 15.05. Fani 교육부장관
- 15.06. Nadimi 한-이란의원친선협회장
- 16.05. Ebtekar 부통령 겸 환경청장
- 16.08. Vaezi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 16.09. Khosro 산업광물부 차관 겸 무역진흥청장
- 16.09. Farhadi 과학기술연구부 장관
- 16.12. Mansour Moazami 산업광물무역부 차관보 및 이란개발혁신기구 이사회 의장
- 17.01. Khazaei 재정경제부 차관보 겸 투자청장
- 17.06. Ali Taiebnia 재정경제부 장관
- 17.06. Ali Larijani 국회의장
- 17.09. Azari Jahromi 정보통신부 장관
- 17.10. Ali Najafi 테헤란 시장
- 17.12. Hashemi 보건복지부 장관
- 18.09. Abbasi 한-이란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 19.06. Hammati 이란 중앙은행(CBI) 총재
- 22.11. Isa Zarepour 정보통신기술부장관
- 25.8 Ehsan Arkani 감사원 사무총장

□ 최근정세

- 2013.8.4. 중도개혁과 연합의 로하니 대통령 취임
- 2015.7.14. 이란 핵합의(JCPOA) 최종 타결
- 2016.1.16. 대이란 유엔 제재 해제
- 2017.5.19. 제12대 대선에서 로하니 대통령 재선
- 2018.5.8.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선언
- 2018.8.7. 미국의 대이란 제재 1단계 복원
- 2018.11.5. 미국의 대이란 제재 2단계 복원 및 한국 등 8개국 제재 예외국 지위 인정
- 2019.5.2.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
- 2019.8월초~9.20.원화자금 활용 인도적 교역 시행
- 2019.9.20. 美 재무부 이란 중앙은행(CBI) 제재 강화
- 2020.1.3. 술레이마니 IRGC 사령관 미군 공습으로 사망
- 2020.11.27. 이란 핵과학자(파크리자데) 피살
- 2021.1.4. 이란,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케미호) 억류
- 2021.4.9. 한국케미호에 대한 억류 해제
- 2021.6.19. 제13대 대선에서 라이시 후보 당선
- 2021.8.5. 제13대 대통령 라이시 취임식
- 2022.9. 마흐사 아미니 사망 관련 반정부 시위
- 2024.1.3. 이란 케르만 폭탄 테러
- 2024.4.1. 시리아 소재 이란 영사관 공습 발생
- 2024.4.13. 이란, 이스라엘 본토 공격
- 2024.4.19. 이스파한 인근 폭발 발생
- 2024.5.19. 이란 대통령·외교장관 탑승 헬기 사고
- 2024.7.5. 제14대 대선, 페제시키안 후보 당선
- 2024.7.30. 제14대 대통령 페제시키안 취임식
- 2024.10.1 이란, 이스라엘 본토 미사일 공격
- 2024.10.26. 이스라엘, 이란 군사시설 정밀 타격
- 2025.4.26. 이란 압바스 반다르 항구 폭발 사고
- 2025.6.13.~24 이란-이스라엘 무력충돌
- 2025.9.28. 안보리 대이란 제재 복원(스냅백)
- 2025.12.28. 이란 경제난 항의 시위 발생

[참고자료 2] “2025.12.25.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 차원에서 이란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 주요 요지⁹⁾

1. 전 문

- (1)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및 기타 국제 인권 규범의 목적과 원칙에 의거
- (2) 이란의 인권상황에 관하여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모든 결의, 특히 유엔총회 결의 80/220 및 인권이사회 결의 58/21 상기
- (3) 모든 국가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자국 관할 하 모든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
- (4) 이란의 주권·독립·통일 및 영토 보전과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선언을 상기
- (5) 유엔 헌장 제2조에 따른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상기
- (6) 2025.12.28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시위와 관련한 이란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재차 표명 하며, 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및 다수의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음을 상기
- (7) 평화적 시위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폭력적 진압, 여성·아동 포함 시위 참가자에 대한 초법적 살해 의혹,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인한 수천 명의 사망자 및 다수의 부상자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 (8) 아동 포함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실종 및 연락 차단 상태의 구금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 (9) 2026.1.8. 이후 시행된 전국적 인터넷 차단 및 통신 두절 조치가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침해 사실의 기록을 방해하거나 온라인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모든 조치를 규탄함을 재확인
- (10)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근 수년간 반복된 국가 주도의 무력 사용과 지속적·체계적인 가해자 불처벌 문제에 대해 우려 표명
- (11) 2025년 이란 내 사형 집행 건수가 높은 수준이라는 보고에 경각심을 표하며, 최근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의 사형 위협에 깊은 우려 표명
- (12) 모든 개인의 생명·자유·신체에 대한 권리와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확인하고, 누구나 평화적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함을 재확인

9) 출처: 외교부 아중동국 중동1과, 2026.02.27.

- (13)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불처벌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이 국제법에 따라 모든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

2. 본 문

- (1) 2025.12.28. 시작된 전국적 시위 관련,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여성·아동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망 및 대규모 부상, 수천 명에 대한 자의적 체포 및 구금 등 이란의 인권상황에 대해 강력히 개탄
- (2) 이란 정부가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존중·보호·이행하고, 초법적 살해, 자의적 생명 박탈, 강제 실종, 성·젠더 기반 폭력,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외부 접촉 차단 구금,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중단할 것을 촉구
- (3) 피해자·생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표적 협박과 괴롭힘을 중단하고, 진실·정의 및 구제(보상 포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국제인권법상 공정재판 보장에 부합하는 가해자 책임규명 요구
- (4)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하고,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법적 장벽 제거 요구
- (4 bis) 시민사회, 인권옹호자, 언론인 및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여성에 대한 지속적 차별 종식 촉구
- (5)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인터넷 복원을 요구하고, 표현·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터넷 접근 유지의 중요성 강조
- (5 bis) 국제인권법상 의무에 따라 ‘가장 중대한 범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및 18세 미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집행 금지를 촉구하고, 법원의 공정재판 보장 요구
- (6) 이란 사실조사단(FFM) 임기를 2년 연장하고, 제64차, 67차 인권이사회와 제81, 82차 유엔총회에 보고 요청
- (7) 이란 사실조사단이 시위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혐의에 대한 긴급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제63차 인권이사회에 보고 및 제81차 유엔총회에서 구두 업데이트해 줄 것을 요청
- (8) 이란 인권 특별보고관 임기를 제61차 인권이사회 종료 이후부터로 1년 연장하고,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기존 권고사항 이행 여부 평가를 요청하며, 제64차 인권이사회 및 제81차 유엔총회에 보고 요청
- (9) 특별보고관과 사실조사단 간 긴밀한 협력 장려
- (10) 사실조사단 및 특별보고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을 사무총장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관련 유엔 기구의 전면적 협력 촉구

- (11) 이란 정부가 사실조사단 및 특별보고관에 적극 협조하고, 지체 없는 입국을 허용하며, 이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참고자료 3]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란을 위해 시위하는 이란 국민들 을 인정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안

Recognizing and expressing support for the Iranian people protesting for a free and democratic Iran.

Whereas, for nearly five decades, the people of Iran have endured brutal repression under the Islamic Republic, a regime that denies basic human rights, silences dissidents, and responds to peaceful protest with violence;

Whereas, once again, the people of Iran are courageously taking to the streets to demand economic opportunity, human rights, dignity, and freedom;

Whereas the Islamic Republic has responded to the ongoing protests with brutality by killing protestors, arresting thousands, and restricting internet access and telephone lines;

Whereas the people of Iran are in part protesting the Islamic regime's economic mismanagement, corruption, internal suppression, and unjust executions;

Whereas access to free expression, open information, and uncensored communication are fundamental human rights;

Whereas the inspiring 2022 Women, Life, Freedom protests demanded an end to the Islamic Republic and its violence, including against Iranian women and ethnic minorities;

Whereas the barbaric so-called morality police and other arms of state suppression have a lengthy history of repressing the Iranian people's fundamental freedoms, including the freedom to assemble, the freedom of religion, women's rights, and LGBTQ rights;

Whereas the Islamic regime has engaged in systematic efforts to intimidate, harass, detain, and harm political dissidents, activists, and journalists both within Iran and beyond its borders;

Whereas the people of Iran deserve the right to dignity, democracy, and self-determination and to be free from the brutality of the Islamic Republic; and

Whereas, on January 26, 2023,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House Concurrent Resolution 7, commending the bravery, courage, and resolve of the Iranian people: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1) commends the bravery and resolve of the Iranian people in their fight for a free and democratic Iran;

(2) strongly condemns the brutality of the Islamic Republic, which uses violent military force to suppress civilian protesters;

(3) demands that the Iranian regime cease its threats, intimidation, and violence against peaceful protesters,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and allow unhindered medical assistance to demonstrators wounded by the regime's violent repression;

(4) recognizes the right of the Iranian people to freely determine, through free and fair elections, the nature of their political regime;

(5) urges immediate expansion of unrestricted internet access and civilian lines of communication across Iran; and

(6) implore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o work in coordination with its allies to consider and implement concrete measures to deter further lethal violence against protesters.